

한겨레

〈한겨레〉에서 시민사회 토론 공간으로 제공한 지면입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을 갖추고 인신공격을 멀리하며 합리적인 논거를 담은 제의, 주장, 비판, 반론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글과 함께 이름과 직함, 연락처,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시오. 청탁 글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로 짜이므로 원고료는 드리지 않습니다. 전자우편 opinion@hani.co.kr, debate@hani.co.kr, 팩스 (02)710-0310

‘규제의 역설’ 이전에 ‘경제민주화’ 참뜻 헤아리길

이하규 성균관대 법학과 3학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정권교체 준비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을 한껏 달구었고, 박근혜 당선인 역시 대선 공약의 집면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유통산업법을 개정하고, 인수위원회도 앞으로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그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한편에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규제의 역설’이라는 소리가 대기업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즉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가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의 역설’의 등장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

업의 목적상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같은 맥락으로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유통산업법에서 정한 강제휴무에 따라 남아도는 인력이 생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한 대형 마트 관계자의 항변도 일리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허전하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문득 이 장면에서 학생 시절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꾸짖음에 대응하던 철없는 학생의 모습이 떠오른다.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 선생님은 “앞으로 숙제를 해오지 마!”라고 지시하고, 학생은 그 말에 따라 다음에도 숙제를 해가지 않는다. ‘앞으로 더 잘해오라’는 말 이면에 있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은 학생에게 선생님은 허탈함을 느낀다.

물론 이는 일면을 극대화한 비유에 불과하며, ‘규제의 역설’을 말하는 기

업과 선생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학생’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지는 않는다.

이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의 규제를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의 함의가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해 경제민주화는 필요하며 이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고, 대통령 당선 직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첫 만남에서도 “일자리 지키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규제의 역설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이며 ‘경제민주화’와 ‘고용’이 기업의 경영목적이나 경제논리상 상충되는 의미일지라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그 둘을 조화롭게 유지시켜 가자는 뜻이 아닐까? 이러한 경제민주화의 이면에 내재된 의미를 박 당선인이

추구할 국정 방향과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 대기업은 ‘규제의 역설’을 외치는 데 상당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모든 기업들의 경영철학으로 자리잡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소비자의 의식도 변했다. 환경, 인권, 윤리 등을 고려한 기업의 경영은 고무적이며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만이 ‘사회적 책임’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정부 정책의 이면에 있는 뜻을 지혜롭게 헤아려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기업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또다른 이름인 일자리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높게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다.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뒤집는 새누리당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새누리당은 최근 쌍용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의 전원 복직에 합의하는 등 상황이 달라진 점을 들어 쌍용차 국정조사 요구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비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듯 쌍용차 기업노조(위원장 김규한)도 성명을 통해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당이 국정조사 거부 주된 이유로 삼고 있는 쌍용차와 기업노조 간의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를 쌍용차 사태 해결의 단초로 받아들여서는 어렵다.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는 그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2009년 8월 6일 당시 노사가 합의(이하 8·6합의)한 내용 가운데 일부를 2년 반가량이나 지연시켜 이행한 것, 그 이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도리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첫째, 절차적으로 볼 때 무급휴직자 복직 문제는 쌍용차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이의 8·6합의에 따른 것이었으나,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는 정작 합의 당사자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배제하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

차지부는 8·6합의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가장 실질하게 무급휴직자 등을 포함한 ‘쫓겨난’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를 요구해왔던 주체이자 당사자라는 점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합의의 주체에서 제외된 것은 이번 합의의 중요한 흠결이다.

또 내용적으로 볼 때에도 이번 무급휴직자 합의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정리해고 노동자 159명과 희망퇴직자 1904명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이들 또한 잘못된 정부 정책과 경영진의 과오로 아무런 안 전장치 없이 회사 밖으로 내몰리게 된 한술밥 동료들이건만 오히려 이번 합의의 통해 이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자 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작 합의가 필요한 정리해고자 등에 대해 침묵하면서 8·6합의의 이행일 뿐인 무급휴직자 복직합의가 어떻게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해결이고 국정조사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새누리당은 답변해야 한다.

둘째,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가 발표되었을 때,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는 사

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쌍용차 정리해고와 국가폭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리 경고한 바 있다. 국정조사 요구는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쌍용차 청문회 결과, 쌍용차의 정리해고요건 조작 의혹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서 나온 당연한 결론이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대선 직전 두 차례에 걸쳐 당의 공식적인 방침으로 ‘대선 직후 첫 국회에서 실시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쌍용차의 회계장부 조작 및 정리해고의 불법성 의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 정리해고로 인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쌍용차와 기업노조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회계조작 의혹 등은 금융당국과 법원에 의해 정당성과 합법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당국과 법원이 쌍용차의 정리해고와 관련해 민간회계법인의 회계 내용을 수용하는 데 급급했을 뿐 회계에 대한 독

자적인 검토 자체를 방기하였다는 사실은 수차의 토론회를 통해 명백히 논증된 바 있다.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법치국가로서의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일이다. 그럼에도 정의를 세우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회·정치적 노력을 국제신인도 훼손으로 몰아가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을 회피하려는 궤변일 뿐만 아니라 긴 안목으로 볼 때 국가의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주범임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으로 이번 합의가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미 여야가 약속한 국정조사의 발목을 잡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야말로 난마처럼 얽힌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단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신뢰 사회를 말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의 입으로 했던 대국민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가 아닌가?

눈 치우려다 눈 속에 갇혀서야

안준성 미국 변호사

해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1월이면, 도로 곳곳에 쌓인 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대로 눈을 치우지 않아서 보행자나 차량이 지나다니기 어려운 곳이 많다. 주택가 골목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의 경우, 골목길이 포함된 이면도로를 시민의 책임으로 떠넘긴 후, 처벌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문제는 정책적 아이러니다. 서울시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에 따라서 눈을 치울 경우, ‘이론적으로’는 골목길이 꼭 막힐 수 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주민들은 각자 대문을 등지고 세로 1m의 직사각형 안에 쌓인 눈만 치우면 되기 때문이다. 종이신론 두 장을 세로로 붙인 후 대문 폭만큼 깔 수 있는 범위다. 담벼락 앞에 쌓인 눈은 치울 필요가 없고 대문 앞의 눈은 도로 중앙부분으로 밀어내면 된다. 골목길 가운데는 사방에서 밀려온 눈으로 만들어진 눈봉우리 하나가 생길 수 있다. 골목길 입구에서 바라볼 경우, 도로 양 끝 담벼

락 밑에 쌓인 두 개의 눈봉우리와 함께 ‘뫼 산(山)’자 모양으로 보일 것이다. 눈을 치우려다가 눈 속에 갇힌 꼴이다.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는 시카고와 보스턴은 최소 제설 폭을 지정해서 통행로를 확보한다. 할리우드의 레드카펫을 골목길 가운데 길게 펼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골목길이 넓어도 1-1.5m 폭의 통행로에 쌓인 눈만 치우면 되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동네 주민들이 눈 속에 고립되는 정책적 아이러니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차이점은 뭘까? 시카고와 보스턴의 제설의무 조항은 통행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반면 ‘자연재해대책법’과 서울시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의 입장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정책의 이름도 ‘내 집 앞’ 또는 ‘내 점포 앞’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겨울철 골목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는 정책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 ‘내 집 앞 눈 치우기’에서 ‘골목길 눈 치우기’로의 개명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다.

렌즈세상



참조?

지난 주말, 따뜻한 마음에 교통카드 한 장과 카메라만 들고 경기도 가평에 다녀왔습니다. 으며 거머 만난, 지금만 것에 비해 값진 풍경들입니다. *출조. 이리 외서 몸 녹여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승현/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기고

미래창조과학부도 분야별 맞춤형 정책을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 연일 화제다. 과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의 기능이 합쳐진 거대 부서이고 차기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해당사자들 간에 갈등과 견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같이 미래의 삶과 경제에서 과학기술이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핵심 이슈들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과학기술에는 매우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며, 분야마다 우리나라가 도달해 있는 수준이 크게 다르므로 각각의 현실에 맞춰 전략과 실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하고 있는 아이티(IT), 조선, 자동차 등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거나 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어야 한다. 반면, 미래의 거대산업으로 부각되는 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성공사례가 전혀 없어서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위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키우고자 하는 부문별로 그에 맞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과학기술은 실생활 적용 여부에 따라 기초와 응용/실용화 연구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문제는 기초와 응용 간에 심각한 노선 갈등이 존재하고, 이는 교육과 예산 배분에서 상당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기초과학 없이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고, 어떤 이는 기초의 비실용성과 장기성을 지적한다. 문제의 핵심은 기초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기초연구를 발굴하여 지원하느냐다.

지난 십수년 동안 우리나라 기초과학 분야에서 성과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영향지수가 큰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의 건수였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들이 과학계의 오래된 속제를 해결하거나 획기적인 발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학계나 시장의 판도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의 성과였느냐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느냐가 아니라, 그 논문의 학문적 혹은 실용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하게 따지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한참 지난 후에도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다. 중요한 것은 20년 후에도 지식으로서의 가치나 실용 가능성이 있을 만한 연구를 하느냐다. 기초과학 정책에서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은 우리와 같이 제한된 자원을 가진 국가에서 의미 있는 연구 주제를 찾아내고, 연구자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정확히 평가하여 발굴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래산업에서 서로 다른 분야들의 융합은 성공의 필수조건이다. 자동차나 로봇은 철로 만든 기구가 아니라 70% 이상이 아이티 요소를 가진 융합 제품이다. 조선업이 돌파구로 삼으려는 해상공장 건설의 핵심은 거대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은 과학, 공학, 약학, 의학, 정보학, 디자인 등 수많은 분야 간의 융·복합을 통해서만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학계가 분야별 이기주의와 주도권 싸움이 심한 탓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과학기술계가 융·복합과 협업 체계를 스스로 갖추기 어려울 정도로 분열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융·복합의 중개자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비전과 목표를 확고히 설정해야 한다. 낭비적 관행과 전문가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면서,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투자 우선순위를 그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갈등과 충돌은 필연적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조정자로서 중심을 확고히 가지고 미래 10년을 설계해야 한다.

백승중의 역설

역사가

농부 이경해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 농고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산기슭을 일구 목장을 만들었다. 세상을 먹여 살리는 ‘농사’야말로 가장 귀한 직업이라고 믿은 그였다. 농사를 잘 지어보려고 그는 친구들과 함께 농민단체도 만들었다. 첫새부터 달 뜨는 초저녁까지 그들은 땀 흘려 일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산업화’ 귀신에게 낫을 빼앗긴 이 나라 권력자들은 농부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그 근본을 따져보면 다국적 자본이 지배하는 세계체제가 문제였다. 지푸라기를 쥐는 심정으로 이경해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찾아갔다. 그는 한국 농민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저들은 냉소하였다. 그의 처절한 심정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을 사상이며 ‘조선 독립’을 절규하던 이준 열사와도 같았다. 대한민국 농부 이경해는 세계무역기구 제5차 각료회의장 바깥에서 분사하였다.(2003년 멕시코 칸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턱없이 값싼 수입농산물 가격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한국 농민의 경작지는(평균 1.3ha) 미국의 100분의 1이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은 우리 농민들을 몰이꾼에 쫓기는 토끼 신세로 만들어버렸다. “나와 우리 친구들은 이를 피해 이 작목, 저 작목으로 틈새를 찾아다녔지만, 항상 그 틈새에서 도망친 다른 동료들을 만날 뿐이었다. (중략) 나는 하룻밤 새 정든 고향을 버리고 떠나버린 친구의 낡고 오래된 빈집을 돌아보며 그가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다. 빛에 놀려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친구 부인의 애달픈 울부짖음을 듣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못했다.”(이경해가 세계무역기구에 보낸 편지)

이경해를 죽음으로 내몬 농촌 현실은 아직도 계속된다. 아름다운 농촌이란 그저 허울일 뿐이다.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농촌을 파괴한 산업화 세력은 흠뻑귀나 마찬가지로. 이경해가 피를 토하며 말했듯, 저들의 산업주의는 온 세상 농업을 말살하고 인류를 파멸시키려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섬인가?